

합의 불가능한 여야 정책기조

# 與 “日대응·경제 우선” vs 野 “민간주도성장이 경제 살려”

경기 불황에도 정쟁에만 몰두

20대 국회 계류 법안 1만5762건

20대 의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에 나서기로 합의한 여야가 시작부터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사법·정치 개혁안은 물론 민생·경제 지원책에 대해서도 여전히 저마다의 기조를 고집하고 있다. 여당은 산업·기술·민생 개발을 중심으로, 야당은 시장·경영·정책 개발 위주로 힘을 쏟는 모양새다.

메트로신문은 13일 여야의 핵심 추진 법안을 정리했다.

## ◆與, 소득·공정·성장 방점

최근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정기 회에서 처리할 중점 법안 238개를 선정하고, 513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달 18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8개 주요 입법 과제에 대해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경제 활성화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민생 법안과 개혁 법안에 대한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표명하면서, 장기 계류 중인 비쟁점 법안 처리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먼저 일본 경제보복 대응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가연구 개발 혁신 특별법 등을 최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핵심 품목 양성과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경제 관련 추진 법안은 ▲데이터 경제 3법 ▲수소경제 육성법 ▲소상공인보호법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 등이 있다. 대부분 산업 개발에 집중했다.

민생을 위해서는 ▲기초연금법 ▲유치원 3법 ▲청년기본법 등을 추진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속도가 불

은 사법·검찰 개혁안도 올해 안에 처리하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 정체성을 반영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도 신속

처리 대상이다.

## ◆野, 친기업·친시장 집중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이론과 달리 민간주도 성장 정책을 강조한다.

한국당은 지난달 발간한 ‘민부론’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면 중소·벤처기업 경쟁력도 강화하고, 산업도 발전한다는 모형을 제시했다. 산업 발전은 국토·지방 경쟁력을 키우고, 성장한 국토·지방은 다시 기업을 살리는 순환 효과가 이어진다는 게 한국당 계산이다.

시장 활성화와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먼저 ▲소득주도성장폐기 3법 ▲국민부담경감 3법 ▲국가재정법 ▲재정건전화법 ▲사회보장기본법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친기업 제도 형성을 위해 ▲법인세율 인하법 ▲상속세·증여세 개선법 ▲기업 경제 활성화법 등으로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도 줄곧 내놨다.

올해 들어 심화한 사회재난·자연재해의 피해 최소화와 지원을 위한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지속 가능한 기반 시설 관리 기본법 ▲강원산불·포항지진 피해구제 특별법 등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민생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가정 폭력방지법 ▲남북협력기금법 ▲국민연금법 등도 우선 처리 대상으로 꼽힌다.

◆합의 자리에 없던 사람은 “합의했다” vs 합의한 사람은 “한 적 없다”

경기 불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야가 정쟁에만 몰두하는 모양새다. 특히 내년 5월 말 임기가 끝나는 20대 국회의 계류 법안은 1만5762건에 달하지만, 얼마나 처리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앞서 민주당을 제외한 여야 4당 대표는 지난 7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최한 초월회에서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한 ‘정치협상 회의’ 가동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흘 후인 11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문 의장과 여야 대표가 오늘 사법·정치 개혁안 처리를 두고 첫 번째 회의를 진행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초월회에서 이날 첫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하지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회의한다는 얘길 듣지 못했다”며 “초월회 때 저는 ‘충분한 준비를 거쳐 13일 예정한 문 의장의 해외 순방 뒤에 하면 좋겠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선을 그었다.

당초 ‘정쟁의 장으로 변질할 수 있다’는 이유로 초월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이 대표는 이날 “황 대표가 4일 전 학의문까지 작성한 정치협상 회의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는 모순적 비판을 내놨고, 합의 현장에 있었던 황 대표는 한 입으로 두 말한 끝이 됐다. 민생·경제 법안 처리 부분에서도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8일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탄력근로제 확대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자는 입장이다.

/석대성 기자 bigstar@metr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0일 충남 아산 삼성디스플레이 공장에서 만났다.

## 文 ‘親삼성·조국’… 엇갈린 여권

현 정부여당의 행보 변질, 지적도 “국정지도자가 투자 애걸하는 모습” “일자리 창출, 기업과 정부 협력 필수”

문재인 대통령의 ‘친(親)삼성’ 및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행보를 바라보는 여권의 시선이 분분되는 모양새다. 실제 ‘집권당’ 더불어민주당과 ‘여권 성향 야당’인 정의당은 문 대통령의 조 장관 임명 및 친삼성 행보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그래서 일각에선 현 정부여당의 행보가 변질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문 대통령의 친삼성 행보 때 여권 불협화음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충남 아산시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에서 개최된 ‘디스플레이 신규투자 및 상생 협력 협약식’에 참석해 “정부는 삼성디스플레이의 과감한 도전을 응원하며 디스플레이 산업 혁신으로 기업들의 노력에 함께하겠다”며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을 위해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의 때 “대통령의 친삼성 행보가 특별히 국민에게 실리를 가져다주는 게 아니다. 삼성을

포함해 모든 기업의 투자 결정은 오직 기업 자체의 성장 및 수입 전망에 따라 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사정한다고 투자하고 투자하지 말라고 투자 안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심 대표는 “오히려 국정지도자가 투자를 애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투자를 사회를 위한 것으로 호도하면서 이를 볼모로 세계 지원이나 특혜성 규제 완화 등 과도한 기업의 요구를 국민들에게 전가하게 된다”며 “국정의 난맥을 친재벌·반노동으로 돌파할 수는 없다”고도 했다.

심 대표가 문 대통령의 친삼성 행보에 우려를 표했기 때문일까. 민주당에서는 심 대표 발언을 반박하는 주장이 곧장 나왔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12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문 대통령의 방문이 ‘친재벌 반노동’ 행보라는 심 대표도 이러한 이분법으로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지상 과제에 대가설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싶다”며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는 기업과 정부의 협력이 필수”라고 반박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

## ‘조국 가족 의혹’ 법원심리 시작… 정경심 교수 18일 첫 재판

‘총장상 위조 혐의’ 정교수 불출석 예상 5촌 조카 25일·큐브스 前 대표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첫 재판 절차는 오는 18일 진행된다. 하지만 정 교수 측이 변호인의 견서를 재판부가 제시한 기한까지 제출이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재판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18일 오전 11시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

된 정 교수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 교수 측은 지난 11일까지 변호인의 견서를 제출하라는 재판부의 공판준비명령을 받았지만, 기록 열람·복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제시한 기한까지 제출이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지난 8일 제출한 바 있다.

예정대로 18일 준비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정 교수가 직접 법정에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앞서 정 교수는 12일 검찰에 네 번째 출석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부장검사)는 이날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교수는 지난 3일부터 5일, 8일에 검찰에 출석해 관련 혐의들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정 교수는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모펀드 의혹의 인물인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구속기소)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 사모펀드 연루 의혹을 받는 특수임명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큐브스) 전 대표 정모(구속기소)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손현경 기자 son89@

## 조국 ‘검찰개혁’, 특수부 축소… 15일 국무회의서 의결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별수사부(특수부)가 폐지될 전망이다. 법무부가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한 검찰의 자체 개혁안을 수용하기로 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3일) 검찰 개혁 관련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검찰 특별수사부 축소와 명칭 변경·기능 조정을 위한 규정을 오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해 확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법무부도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 대검찰청 강남일 차장 검사와 이원석 기획조정부장은 법무부 과천정부청사에서 검찰개혁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직접수사부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특수부를 폐지하겠다는 대검 건의를 받

아들여, 3개 검찰청의 특수부만 남기도록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고 나머지 검찰청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하기로 했다.

검찰청의 부서 편제와 기능에 변화를 주려면 대통령령으로 국무회의 의결과 안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법무부·검찰은 규정 개정을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 내 형사·공판부 강화도 추진된다. 이는 특수부 폐지와 맞물린다. 형사부로 개편되는 기존 특수부 인력을 형사·공판부로 재배치할 예정이기 때문에 형사부는 각종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하는 부서다. 민생과 직결되는 사건을 도맡아 처리하기 때문에 검찰 내에서 가장 많은 사건이 몰리지만 늘 검사 수가 부족해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는 지

적이 제기됐다. 공판부는 수사검사가 기소한 사건 기록을 토대로 법정에서 피고인의 혐의 입증을 맡는 공판검사들로 구성된 곳이다.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루는 공판중심주의가 자리 잡으며 공판부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역시 인력난에 시달려왔다.

법무부는 공개소환 폐지, 심야 조사 제한 등 방안도 검찰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개혁의 주체인 법무부와 검찰이 모여 협의를 한 선언적 의미가 있다”고 했다. 또 “어느 곳에 특수부를 남겨둘지는 이번 주 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국 법무장관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유지된다. 따라서 나머지 2곳이 어느 곳 일지만이 관건이다.

/손현경 기자